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124명

광주 20·전남 104명, 전남도의원 3명 市·道, 환수 조치·징계 절차 밟기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광주·전남지역 공직자는 모두 12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당 수령액은 모두 9천900만원으로, 광주의 경우 1인당 평균 90만원, 전남은 1인당 78만원 꼴이었다.

〈관련기사 3면〉

또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권의 영농 실적이 없는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지역 정치권 인사로는 전남도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사·도 분청과 사·군·구, 공·사·공단·산하

기관 공무원 중 2005~2008년 쌀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자 4천418명(광주 529명, 전남 3천88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두 124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 자진 신고자 529명 가운데 부당수령 공직자는 20명, 총 수령액은 1천8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령 액수는 325만원이며, 한 자치구의 공무원은 나주시에 소재한 27필지의 농지에 대해 360만원을 수령했으나, 문제가 되자 자진 반납했다.

전남도에서는 쌀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 공직자 3천889명 가운데 모두 104명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도 분청 공무원인 19명(총 1천100만원), 사·군 공무원인 85명(7천만원)이며 1인 수령 최고액은 550만원이다.

직급별로는 5급(사무관) 이상이 18명, 6급 이하는 86명이며 4급 공무원도 분청 과장급 1명, 일선 시·군 기획실장급 2명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를 소유하면서 쌀농사만 지을 때 받을 수 있는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날 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으며, 광주시는 읍·면·동에 설

치된 실경작자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건수에 대한 관정이 나오는 대로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할 방침이다.

시·도는 향후 부당 수령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확정되면 부당 수령액 환수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비수매 및 비로 구매실적이 없는 한나라당 주성영·이철우·이환성 의원,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현역의원 4명과 보은군수(자유선진당)·진천군수(민주당) 등 기초단체장 2명, 전남도의원 3명을 포함한 광역의원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채희중·윤영기기자 chae@

국내 첫 몽탄 내수면 등대 30년만에 불 밝혔다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수면 등대가 30년만에 복원돼 불 밝혔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3일 "1978년 영산강 하구둑 축조로 기능이 상실된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에 있는 몽탄진 등대를 2일 복원, 점등했다"고 밝혔다.



고층자료를 토대로 복원된 이 등대는 역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영산강 내수면을 운항하는 소형 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원형 철근 콘크리트(7.6m) 구조에 조명을 설치해 6마일(11.1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

목포와 영산포 간을 항해하는 선박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이 등대는 우리나라 등대 역사상 내수면 내에 있는 최초의 등표다. 등표란 해상 암초나 수심이 낮은 곳에 설치해 그 위험을 표시하는 시설로 무인등대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설치된 이 등대는 흉어잡이 배 등 만선의 꿈을 싣고 영산포로 항해하는 각종 선박의 안내와 이정표 역할을 했으나 영산강 하구둑 축조로 해양 교통시설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불이 꺼졌다.

/목포=이상선기자 sleslee@



여중생들 사랑의 연탄 배달

광주수피아여중 학생들이 3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주택가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릴레이식으로 배달하고 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120여명은 용돈으로 성금 168만원을 모아 연탄 4천200장을 구입, 14세대의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고용 한파 '취업 대란' 온다

올해 광주·전남의 지방공무원 합격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임용대기 상태로 남아있는 등 불황과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각 기업체는 물론, 지자체와 공기업, 금융권 등의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취업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올해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258명 가운데 18.6%(48명)만 임용됐을 뿐 나머지 81.4%(210명)는 대기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을 방침이어서 공무원 지방생들의 속을 태

우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역시 올해 뽑은 411명 가운데 60.3%(248명)만 임용했다. 광주·전남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된 인력 10명 중 6명은 기약없이 임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내년에는 '취업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의 채용인원은 3천2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4천868명)보다 34.3%(1천668명)나 적은 수준이다. 지방공무원 채용인원도 4천100여명에 그쳐 올해(9천300명)보다 55.9%(5천200여명)나 줄게 된다.

올 신규 채용을 대거 줄인 공기업과 금융권의

광주시 내년 임용시험 안 치러 공기업·금융권 채용 업무 못해

내년 취업문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요구 등에 따라 '신규고용'에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기업 등 주요 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들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20곳에 달했다. 공기업 3곳 중 2곳은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움직임 등에 따라 채용을 포기한 것이다.

금융권도 내년 채용인원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올해 110여명을 새로 뽑았지만 내년에는 일단 신규 채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정치권 배제해야”

지방신문협 정책포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공동 주최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와 대응 전략' 정책포럼에서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기초 발제문을 통해 “중앙 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며 “정치권의 의도대로 자치체중과 구역의 개편이 확실적이고 일

방적으로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지방분권은 오랜 기간 물 건너간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도 “중앙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체제를 개편할 경우 중앙·지방 간, 갈등이 격화돼 전국이 소모적 논쟁이 휘말릴 수 있다”며 “(광역)시·도를 폐지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의 주체로 거듭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동일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 기자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본의원 5층
문의 062-271-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월 달리는 사랑
문의 062-271-1111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김사진
호남한샘학원
교육전화: 062) 352-1111
홈페이지: http://www.hosam.ac.kr

한라

한·일도 바깥법이 한라산 어린 햇잎으로 가득
살짝 한데, 100% 제주 어린잎 녹차로 만듭니다